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한 후 급여 등에 대체 합산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개인명의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법인의 비용을 결제한 경우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만큼은 일반경비와는 달리 반드시 법인명의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인정이 되므로, 결제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법정증빙을 위해서도 거의 모든 기업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해당 임직원의 급여 등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우선 가지급금으로 반영함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일반경비로 충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카드결제시점에 미지급비용을 상쇄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데, 회사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우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상환여부에 따라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거나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한다.

즉,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었으나 아직 지출금액의 소속계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음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결산계정인 가지급금으로 반영한 뒤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면 이를 적당한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해당 사용금액을 회사로 반환하는 경우는 사용시점에 가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부분을 입금되는 금액과 상쇄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① 임직원이 법인카드 사용

차) 가지급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	-----------	---------	-----------

②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입금

차) 보통예금(또는 현금)	1,000,000	대) 가지급금	1,000,000
③ 신용카드 결제일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	1,000,000

하지만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초 사용시점에 가지급금으로 우선 반영한 뒤, 상환 받지 못하게 되면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 임직원이 개인적 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후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① 신용카드 사용시			
차) 가지급금	1,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
② 임직원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차) 급여	1,000,000	대) 가지급금	1,000,000
③ 신용카드결제일			
차) 미지급금	1,000,000	대) 현금예금	1,000,000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 아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에 상환한 경우, 즉 법인카드를 사용했지만 실제의 부담은 임직원 개인이 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 개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회사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면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서이46013 - 10066, 2002. 01. 10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2003도8095, 2006. 5. 26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